

청원건명	노원 소각장 다이옥신 조작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		
청원인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2동 롯데아파트 11동 1401호	
	성명	양순중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부두완 의원		
소개년월일	2003. 10.		
<p>○ 노원소각장 2호기 법정 정기검사 다이옥신 검사결과 0.445ng인 것을 서울시는 0.094ng으로 조작 발표하여 국민은 물론 소각장 운영 전반에 불신에 불신을 더하고 있으며,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환경, 건강, 사회, 경제 등의 불안과 피해를 국민과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p> <p>○ 주민협의체의 지속적인 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옥신 저감시설 : 백필터방식, 활성탄 필터 - 다이옥신 시료채취 상시 가능하도록 - 협약서에 준한 약속이행 등이 묵살당했으며,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p>○ 서울시는 가동률을 높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단계적인 절차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은 한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 소각장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적자부분 때문에 안전성과 환경피해를 무시한다면 차후 몇 백배의 추가경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주민과 협약한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준수하고 진솔하게 주민 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 소각장 가동을 중지하고 · 담당공무원은 양심선언과 책임을 · 동조한 (주)한국시거스 운영사 교체 <p>기자의 전화내용 기사를 보면 서울시 청소과 한상열 과장처럼 거짓말을 하는 공무원은 처음 보았다, 한 마디로 주민과 함께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다. 서울시와 주민간에 불신의 벽이 지속된다면 실패한 소각장으로 폐쇄해야 하며 환경학습장으로 전용되어야 합니다.</p>			

노원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결과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I. 제 안 경 위

- 청원인 :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롯데(아) 11-1401호 양순중
- 소개의원 : 부두완 의원(교육문화위원회)
- 접수 및 회부일자
 - 접수 : 2003. 10. 6
 - 회부 : 2003. 10. 8
 - 접수번호 : 제52호

II. 청원요지

- 노원소각장은 반기1회 이상 측정하게되어 있는 다이옥신 검사를 2호기에 대하여 2003. 5. 29 실시하였으나 통상 60일이 지나 발표하던 것을 미루어오다 측정결과 0.445ng임에도 이

를 조작하여 기준치 0.1ng 이하인 0.094ng으로 발표하였음.

- 명백한 공문서 변조임에도 서울시는 공식사과 없이 운영대행사인 한국시거스(주) 소장의 본사로의 이동조치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조작 발표한 서울시 책임자의 처벌과 소각장 운영대행사의 교체, 주민협약서에 따른 소각장가동중지 및 다이옥신 저감시설설치 등을 강력히 요청함.

III. 청원소개위원의 의견요지

- 서울시는 노원소각장 2호기 법정 다이옥신 검사결과 0.445ng인 것을 0.094ng으로 조작 발표하여 인근주민들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고 있으며 다이옥신 저감시설설치, 다이옥신 시료 상시채취, 협약서에 준한 약속이행 요구 등을 묵살하고 있음.
- 서울시는 가동률을 높이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단계적인 협의절차를 거치고 협약한 사항을 지켜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 급번 조작사건에 따라 즉각 소각장 가동을 중지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야 하며 운영대행사인 (주)한국시거스를 교체하여야 함.

IV. 서울시의 청원에 대한 의견

- 청원인 양순중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노원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진반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체간에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대화를 기피하고 있고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구성현황(협의체위원 : 7명)
 - 그린아파트 협의체위원 : 정대선, 박오목, 최경자
 - 롯데·경남·상아아파트 협의체위원 : 양순중, 임해은, 홍정은
 - 학여울청구아파트(1~5동) 협의체위원 : 유병업
 - 주변영향지역 세대수 6,190(시영 3,481, 민영 2,538, 기타 171)
- 9. 15일부터 9. 29일까지 그린아파트 주민협의체 위원 및 주민들과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하여 쓰레기 반입 및 소각로 가동을 하고 있으며
- 10. 7일 그린아파트 주민협의체 위원 및 주민들(3,027명)은 우리시와 시의회에 자원회수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
 - 이번 건으로 인하여 혐오지역으로 오도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정상적인 가동상태에서 정확하게 재 측정하고
 -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 처벌, 쓰레기 반입금지, 소각로 가동정지 등 생산성없고 무모한 행위를 절대 반대함.
- 이번 건과 관련하여 운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 다이옥신 저감을 위하여 활성탄 현탁액 주입설비를 설치후 가동중에 있으며, 주민들이 추천한 2개의 검사기관에서 주민들의 입회하에 재측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시설보완에 대하여는 폐촉법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와 주민협의체의 협의하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청원으로 수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V. 청원과 관련한 반대입장인 노원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의 의견

- 5월 다이옥신 측정결과 연구용으로 측정한 2호기 다이옥신 과다노출 및 축소 조작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정 드립니다.

< 아 래 >

1. 당 단지 영향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오염지역인 것처럼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2. 그러한 이유로 노원자원회수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정확한, 재측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측정 후에도 지난번과 같은 수치가 나올 경우 기준치 이상의 소각로는 폐쇄하여 주십시오.
4. 당 단지 주민들은 위의 측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순종 이하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담당자 처벌 및 쓰레기 반입금지, 소각로가동 정지 등의 생산성 없고 무모한 행위를 절대 반대하며,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랍니다.
5. 양순종은 노원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사칭하고 다니며, 주민을 선동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자입니다. 참고로 양순종은 2002년 6월 지방선거때 중계2동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정관 10조 6항에 의거 주민협의체 자격도 없는 자로서, 구의원 출마에 낙선하자 다시 협의체 위원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 단지 대책위원들의 강력한 저지에 의하여 무산되자 일부 자기세력을 규합하여 소각장을 위원장 없는 공동체 운영이라는 정관 및 폐쇄법에도 없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현재까지 주민협의체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장본인임을 알려드립니다.
6. 위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당 그린단지 3,481세대의 95%이상의 절대적인 지지와 영향 지역 주민 6,019세대중 과반수 이상인 3,027세대의 서명을 받아 진정하오니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검토 의견

- 노원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결과 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동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소속 부두완 의원의 소개로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 롯데아파트 11-1401호의 양순종 외 1,754명의 동의로 2003. 10. 6접수되어 접수번호 제52호로 2003. 10. 8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청원인의 청원요지는
 -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및관리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각 기별로 반기 1회이상 측정하게 되어 있는 다이옥신 법정 검사률(2호기) 5월 29일에 실시하였으며, 시료채취한 다이옥신 검사결과는 통상 60일이 경과하면 주민에게 공개되어 왔으나 그 시일이 훨씬 경과하여도 서울시가 발표하지 않아 주민들은 “다이옥신 검사결과 은폐 규탄집회”를 가진 바 있었고,(시험결과 확인에 대하여 서울시 담당자는 처음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나중에는 알릴 의무가 없다고 답변함) 집회 다음날에서야 우리 주민은 시의원님과 구의원님으로부터 다이옥신 수치가 0.094ng이라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 받았음.
 - 그러나 서울시는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0.445ng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작하여 기준치(0.1ng)이하인 0.094ng으로 발표한 것이 전국 각 신문 및 방송에서 밝혀졌으며, 아울러 조작된 문서를 노원지역구의 시의원과 구의원에게 보내 지역주민을 기만한 것이 함께 드러났음.
 - 서울시는 명백한 “공문서 변조”라는 범죄행위로 국민을 기만하였고 그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식사과는커녕 운영대행사인 한국시거스(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소장을 본사로 이동 조치한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였음.
 - 이에 우리 주민들은 의원님들께 청원을 드립니다.
 - 첫째 다이옥신을 조작 발표한 서울시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4차례나 소각장다이옥신 기준치가 초과 측정되었음에도 그 때마다 특별한 대안도 없이 주민들의 분노를 무마하기에 급급하였음.(2002년 7월 5일 주민들의 밤샘 시위 끝에 처음으로 환경국장의 사과가 있었던 것이 유일한 서울시의 대책이었음.) 이번에도 전국 소각장에서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 0.445ng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

왔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은폐 및 조작하여 우리주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고 하였으며 당연히 서울시 관련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특히 운영대행사를 관리 감독할 서울시 관련자의 책임외에도 다이옥신 수치를 조작한 관련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기대함.

둘째는 소각장의 안전성 확보를 바랍. 조작을 공모한 운영대행사 한국시거스(주)를 우리주민은 믿을 수 없는데, 주민에게 좀더 신뢰가 있는 업체로 교체하여 주시길 바라며(조작에 가담한 부장이 현재 임시소장을 맡고 있음) 서울시장님과 약속한 협약서에 있는 대로 즉시 소각장가동을 중지하고 다이옥신 저감시설(백필터) 확실히 하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소각장이 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더 이상 다이옥신의 피해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우리 주민의 청원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요망하는 청원입니다.

□ 다음은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이옥신의 측정결과를 조작발표한 서울특별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공신력이 있어야 할 환경측정의 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하였다는 것은 서울특별시의 공신력과 명예가 실추되는 처사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개선은 물론 왜 이와 같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측정결과의 조작이 공문서의 변조, 위조 등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도 따라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공문서의 위조·변조인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함.)

둘째, 소각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위탁운영하는 한국시거스(주)를 교체하여 주시고 서울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소각장 가동을 안전할 때까지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본 청원과 별건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중 3,027명의 연서로 반대의견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중 2개이상의 기관에 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운영중인 한국시거스(주)의 교체문제와 측정결과 조작문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문서의 위조·변조라고 판명이 되면 이를 별개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